

# “2차 공공기관 이전, 통합하는 지역에 집중 안배하겠다”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혀…“중앙·지방 재원 불균형 문제”  
전기 지산지소·용수문제…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통합을 하는 지역을 우선해 집중적”으로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이전에 대해 “지산지소(地産地消·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것)를 거론하면서 ‘에너지가 찬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남부권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유의 솔직 담백한 화법으로 국정운영, 지역 발전에 대한 구상과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시도통합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며 이걸 따로 틀어놓으면 효과가 없다”며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면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지금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한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남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을 대거 건설하는 방식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한강 수계의 예비율이 0.9%에 불과한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에 물을 대거 끌어다 쓰면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수도권 입지의 물리적 한계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지산지소’ 원칙이다.

다.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월등한 광주·전남 등 남부권이 ‘에너지 먹는 하마’인 AI와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라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전력 도매가격 차등제가 시행되면 발전소와 거리가 먼 수도권의 전기료는 비싸지고, 생산지인 남쪽은 저렴해질 것”이라며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싸고 풍부한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억지로 기업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해 호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다”면서 현재 중앙과 지방 재원 배분 불균형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이 72:28”이라고 얘기를 한다”며 “중앙 정부가 예산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 도·시·군에 줘서 집행을 한다. 그런데 그게 75%는 지방의 손으로 집행이 된다.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대통령은 전국을 3개의 특별시와 5개의 광역 단체로 재편하는 ‘5국 3특’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균형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가 통합한다고 해서 재가 재정을 대개 (정부와 지방의 비율을) 65:35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한 번 (예산을) 배정해보겠다”며 “연간 최대 5조원까지 4년 하변 한 20조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추가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통합은 정치 논리 보다는 경제 논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주자. 예를 들면 이 예산 가지고 어디 연륙교 놓고 이런 데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예산은 산업경제 발전 토대 구축, 정주 여건 정비, 문화환경 개선, 기업 유치, 세제·고용 지원,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간에 “오늘 (진행 시간) 90분으로 예정되었지만, 원하시면 충분히 시간을 갖겠다. 밤새 하긴 좀 그렇겠지만”이라고 하자 좌중에 웃음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왜 이 질문을 안 하시냐 했다. 참 어렵다”며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검찰 개혁 논란과 탕형 인사에 관한 이 후보자 지명 문제”라고 언급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관련 질문에도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뭐가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일보가 많아 뭐든지 미운 마녀가 된 것”이라고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을 동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재정 인센티브 특별법에 명시 ‘통합 배당금’ 쟁겨야”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들  
서울서 2차 조찬 간담회  
재정·자치권 확보 힘 모으기로

광주·전남 시·도지사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광주·전남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특별법에 명시해 실질적인 ‘통합 배당금’을 챙기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5일 1차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이날 회의의 최우선 순위는 단연 ‘재정’과 ‘자치권 한’ 확보였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안을 환영하면서도, 지원 기간 종료 이후의 ‘재정 절벽’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정부의 지원안은 기대 이상이지만, 문제는 5년째부터”라며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교부세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현재 받는 예산의 100%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지원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은 특별법에 구체적인 재정 특례 조항을 신설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받거나, 보통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법안에 명시해 안정적인 구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A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4년간의 재정 지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지도록 법안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원 기간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후속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광주 5개 자치구에 대한 교부세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으로 재정이 넉넉해진다면 전라도가 구(區) 단위 교부세 신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재정 분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 이어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는 통합의회 의원 정수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통합 의회 의원 정수의 경우 특별법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공을 넘기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 인구 비례 원칙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정수를 산정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농가 소득 증대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가 통합의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 시도와 정치권은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 농어업, 에너지, AI 산업 육성 등 지역 맞춤형 특례 조항을 최종 보완해, 이달 말 국회의원 18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법률안의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검찰개혁의 목표는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이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결국은 국민의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서 유죄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를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제거돼서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해서 미정 상태”라고 했다.

공소청 수장의 이름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정부안에 관해서는 “헌법에 쓰여있는데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는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임을 분명히 하며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은 목표가 아닌 수단과 과정”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리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